

# 무분별한 친환경 · 유기농법 식량자급 위협

관행농법 소득보다 크게 낮아, 정부정책 다수 위해 신중함 보여야  
농약 양질 농산물 생산 · 노동력 절감 농자재, 과거와도 많이 달라

우 리나라는 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친환경농업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 농업인 대부분은 농법 실천에 따른 수량감소 및 비용증가와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도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친환경농법정책도 그저 화학비료, 농약을 적게 주고 뿌리면 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농업인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개념 정립조차 되지 않아 우리 농업인들은 그저 단순하게 이들 농법을 답습하고 있는 수준이며 일부는 모방하고 있어 정책수요개발이 확실하게 따라줘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모든 농가가 무작정 유기농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 한다면 수량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국농산물 수입이 붓물 터지듯 들어 올 것이고 적절한 사용법에 따라 비료 ·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농법의 농업인들 조

차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양 죄인 취급받는 분위기로 몰고 갈 우려가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정책이 요구된다.

## 관행농법 농업인, 죄인 취급 곤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추천을 받아 관행농법과 친환경 유기농법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벼 재배농가의 단보당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관행농법 생산비 53만원에 비해 친환경인증 유형별로 1.4~1.7배 정도로 높다. 저농약 재배 74만7천원, 무농약 재배 83만9천원, 유기재배 92만2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단보당 소득의 경우 일반 관행농법 53만6천원을 기준으로 저농약 재배는 76.5% 수준인 41만원, 무농약 재배는 84.9% 수준인 45만5천원, 유기재배는 97.7% 수준인 52만4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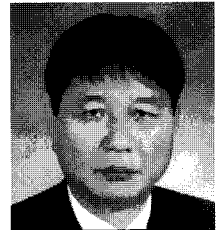
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물론 연차별로 진행되면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그러한 비용부담과 부족한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제논리로 농업을 포기해야 할 국면에 접어들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유기농 유럽 선두, 오스트리아 최고 10% 일본 1백년 역사 불구 0.2% 불과

현재 세계에서 유기농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라고 한다. 미국이 유기농업의 선진국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보이지만 가장 앞서가는 곳은 유럽이고 그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도 전체 농지면적에서 유기재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스위스가 7%, 스웨덴, 핀란드가 각각 3.3%, 독일이 2%순이다.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 세계 유기농업의 현실이다. 유기농 1백년 역사를 갖고 있다는 이웃 일본도 대체로 0.2%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유기농업은 몇%나 될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유기농 1645호(5.4%), 전환기 2313농가(7.6%), 무농약 9938호(32.5%), 저농약 16653호(54.5%)에 이르고 있다. 순수 유기농은 5.4%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작년 290건 정도가 가짜 유기농산물로 판매했다가 취소됐다. 이처럼 최근 가짜 유기농산물 유통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유통업자들이 구속되는 등 유기농산물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내 유기농산물이 과연 몇%, 아

니 통계를 의심케 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진짜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가들까지 싸잡아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민 병 호  
한국영농신문 편집국장

### 올바른 유기농, 환경부하 최소화 화학비료·농약오염 문제 발생 않는 것

그렇다면 올바른 유기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이란 무엇인가? 이는 지역별 환경용량에 맞추어 농축산물 생산규모를 조정하고 자연 순환 농업과 저투입 농법을 확산시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이다. 즉 친환경농업 시스템 전환에 있어 시스템의 의미는 친환경농업을 구성하는 기술적 환경적 요인은 물론 사회경제적 정책측면의 여러 구성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구성된 여러 요소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친환경농업 시스템의 전환은 농업생태계에 있어 환경부하가 큰 농업 시스템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친환경농업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환경의 중요한 특성인 물질순환의 관점에서 선순환이 지속됨으로써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엔트로피 발생이 최소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 환경용량에 적합한 작물 및 가축생산으로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순환체계가 확립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수계의

무분별한 친환경농법 확산, 바람직한가?

경우 일정기준에 달하는 양질의 수질이 유지된다. 또 농업 생태계의 수서동물 및 곤충 등의 생물상이 증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등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 문제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기·친환경 농법이라 할 것이다.

친환경농법 정책, 신중 기해야 소비자 오해, 농산물 소비 감소

그러나 최근 친환경농법은 이러한 정의가 적용되지 않고 무분별 하며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를 혼란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농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정확하고 확실한 환경농업, 친환경농법의 실천 없이 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키고 있으며 정부도 뚜렷한 대안 없이 친환경농법을 농업인에게 인위적으로 전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친환경 농업을 모두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이나 소비자단체들은 우리농산물 하면 제일 먼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할 정도로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

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유럽 농약에 대해 우리 언론과 소비자는 물론 정부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비록 농약은 과거 맹독성 농약으로 이해가 부족했던 소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과거 시각에 머물러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농약, 각종시험 통과한 농업자재 노동력 절감·소득향상 등 순기능 많아

뿐만 아니라 농약은 등록제 도입 이후 고독성농약의 신규등록 및 적용확대 금지 등 문제농약은 일찍이 퇴출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약은 정부가 규정한 각종시험을 통과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정밀화학 제품으로 위해성에 비해 유익성이 월등한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업자재이다. 특히 농약은 농업인이 병해충 및 잡초방제로부터 벗어나게 함은 물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향상과 노동력 절감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등록하는 농약은 거의 대부분이 보통·저독성 농약은 물론 저약량, 고효율의 농약으로 사람과 가축 등에 안전하다고 정부 연구기관 등이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과 1백년 역사의 일본도 친환경·유기농법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인위적인 친환경·유기농 정책에서 벗어나 농업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는 정책을 펴으로써, 다수 농업인이 영위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수많은 관행농법 종사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등 배려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Y

